

국회, '양곡관리법' 상정 보류... 대통령 거부권 변수

김진표 의장 직권으로 표결 미뤄 "3월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 촉구 대통령실 "법안 충돌, 재정적 부담"

'쌀값 안정화'를 위해 추진했던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이 보류됐다. 여야 합의없이 '일방적 처리' 시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감지되면서 양곡관리법 국회통과 여부가 상당기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7일 김진표 국회의장에 의해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이날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3월의 사실정를 정한 뒤 그에 따라 열리는 첫 본회의의 전까지 여야가 합의해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순서를 앞으로 당기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기 전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따로 불러 의견을 나눴다.

논의를 마친 김 의장은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표결을 미루고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의장으로서 본회의를 하기 전에 입장문에서 입장을 밝혔다"며 직권으로 개정안 상정을 미뤘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책임 있는 원내다수당으로서 법안의 합의 처리 노력을 마지막까지 기울여주시고, 국민의힘도 협상에 적극 임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이 개정안 표결을 미루자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항의하면서 장내 소란이 일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왜 국회법대로 안 하시나. 원칙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정회하라", "절차에 따라 부의한 것을 다뤄

야지 이러시면 안 된다" 등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김 의장은 "그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처리한 게 11건인가 되는데 다 선례를 살펴봤다. 가능하면 의사일정이 본회의에 회부된 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면서도 "지금 이 안전에 관해 정부 쪽에서 거부권 행사가 공공연하게 선포된 이상 의장으로서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이어 "국민의힘에 협상의 기회를 한번 더 주고, 국회에서 거부권이 전제되는 입법을 하는 것보다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정부에 이송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나"라며 "누구를 위해서 법안을 의결해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대신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늦어도 다음달 1일까지 3월 의사일정을 합의한 뒤, 그에 따라 처음 열리는 본회의의 전까지 합의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늦어도 3월1일까지 3월의 사실정를 합의하고, 그 의사일정에 따른 첫 번째 본회의 소집일까지 협의가 되면 협의된 대안으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낸 수정안으로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이 '무조건 반대' 때는 민주당의 수정안으로 가결될 수도 있어 여당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수도 존재한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제처를 통해 해당 부처로 간다"며 "다른 법과 어떻게 충돌하는지, 국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재정적으로 어떤 부담이 되는지, 또 농민에 어떤 영향이 가는지 종합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3월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데 (대통령에) 15일의 여유를 국회가 주기 때문에 (거부권 요청이) 7일이 될지 다른 날이 될지 봐야한다"고 했다.

날짜를 못 박을 수 없지만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뜻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대통령은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때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양곡관리법은) 국민의 관심이 굉장히 많고 민생과 관련됐다"며 "한 정당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많은 이견이 있을 것이라는 원칙을 고려해 (거부권 행사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최창지 기자·뉴스

민주, 정순신 낙마에 '인사참사 TF' 꾸린다

문책 대상·정부조직법 개정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낙마한 사태와 관련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학교폭력 문제로 세상이 시끄러운데 우리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나 학교폭력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며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순신 낙마' 사태를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관련 TF를 구성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에 따른 인사 참사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TF를 구

성해 전면적으로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를 겨냥해 "이 사안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권력 전횡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학폭 가해자 입학 과정의 문제점, 인사 검증 시스템 부실과 관련 책임, 제도 개선 문제까지 전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 관련 문책 대상과 관련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인사참사와 관련된 정부조직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인사검증단이 법무부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며 "예를 들어 인사혁신처 등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검토가 정책위 차원에서 이뤄지고, 관련 법안이 발의될 듯하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김진희·50억 클럽' 쌍특검 당론 추진

민, 의총서 "3월 중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진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광상도 전 의원이 연루된 '50억 클럽'을 자체 조사하는 쌍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양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월 임시회 중으로 쌍특검 국회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발의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나와 있던 특검 법안도 있고 추가로 내용을 논의, 3월 중으로 발의해 정의당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서삼석 "한전의 저온 창고 위약금 부과 개선 촉구"

서삼석(사진) 더불어민주당의원(영암·무안·신안)은 27일 "소형 농작물 저온 창고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위약금 부과는 열악한 농업 현실과 너무도 큰 괴리가 있어 시급히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불합리한 농사용 전력,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농촌에서 생산하는 대로 다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되지 않는 현실에서 일정한 범위의 가공 농작물에 대해서는 저장해 자체 소비하도록 해주는 것이 합리적인 처사"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나라, 배주는 되는데 쌀,



김치는 허용되지 않아 위약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단순 규정의 모호성뿐 아니라 농가소득 증대라는 소형 농작물 저온창고 지원 사업의 도입 취지와도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농사용 전력 문제는 농민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정보위 전체회의 출석한 윤희근 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 "야, 처벌 강화 반대" vs 야 "권력형 학폭 무마"

정순신 아들 학폭 현안질의

여야는 27일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를 두고 대립했다. 야당은 "권력형 학폭을 무마했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민주당이 학폭 처벌 강화를 반대했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의 개회에 앞서 교섭단체 간사들에게 정 변호사 관련 긴급 현안질의 협의를 주문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더글로리라는 드라마 때문에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상당히 높은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학교 기숙사에서 24시간 같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가해진 학교폭력이기 때문에 더글로리보다 훨씬 더 가혹한 폭력이라는 지적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행배 무소속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공직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 가운데 직계존비속의 민사행정소송을 묻는란이 있는데 아니라고 한다.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그냥 지나갔을 일"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민 의원은 정 변호사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총괄하는 한동훈 법무장관, 또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권력 나눠먹기"라고 날을 세웠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인터넷만 치면 다 나오는 정순신 자녀에 대한 문제를 교육부가 몰랐다면 책임의 방기다. 알았다라고 하면, 대단히 악랄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교육위원장 주관으로 여야, 교육부가 함께 하는 학폭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는 협의체를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김영호 의원은 "권력층 자녀들이 연루된 학폭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부나 교육위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제안했다. 정 변호사 자녀가 서울대에 정시로 입학했는지, 제3의 피해자도 강제 처분이 지연됐는지 등에 대한 확인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도 "정 변호사 아들

권 전형적인 권력형 학폭 무마이고 전형적인 권력과 재산을 가진 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서 가해진 2차 가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학교폭력 관련 생활기록부 기록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자는 조경태 의원의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부분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학폭위 심의사항 자체가 그 이후에 어떠한 재판으로 시간 끌기가 이뤄지든 상관없이 그 회의록 자체가 입학사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은 "제가 발의한 것은 학교폭력에 의해서 전학한 학생들, 전학을 갈 정도로 심각한 학교 폭력의 행위자다. 가해자의 경우 졸업한 날로부터 10년까지 기록을 남기도록 하자는 법안이었다"며 "이번에 법안을 통과시켜서 교육위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